



위기의 쌀 산업, 대책은 없는가?

쌀농사 살리는 국민적 합의 · 공감대 이뤄야

농업 · 농가 소득 52%, 24% 점유, 소득 감소땀 농업위기로 연결될 수도
생산자 인내 · 유통 주체들 노력 · 소비확대에 기대, ‘쌀과 함께’ 인식 필요

금년 수확기의 쌀 가격이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이후 정부는 단기(8.29) 및 중장기 대책(9.4)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햅쌀의 산지가격이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난해 보다 5~10%씩 하락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출하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격하락은 더 가속화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가격하락은 쌀 농가의 소득을 감소하게 하고, 쌀 농가의 소득감소는 한국 농업의 위기로 비화될지도 모른다는데 문제의 심각

성이 있다. 왜냐하면 쌀 소득은 농업소득의 52%, 농가 소득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농가의 대표적인 소득원이기 때문이다.

쌀 산업은 단순히 농가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의미 외에도 우리민족과 함께 해 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운명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요, 작물이라는데 더 큰 중요성이 있다.

쌀 산업, 왜 위기인가

그런데 최근에 와서 쌀 가격이 하락하고, 쌀 산업의 위기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지

금까지 드러나지 않고 축적되어 왔던 문제들이 하나씩 표면화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지적해 보면 첫째로는 수급의 불균형 문제이다. 벼의 재배면적은 1975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다. 즉, 벼의 재배면적은 1975년 대비 2000년에 88%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쌀 생산량은 1975년 대비 113%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게다가 가구당 연간 쌀 소비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0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93.6Kg은 1975년의 74% 수준에 불과하다.

쌀 소비의 연평균 감소율을 보면 80년대는 연평균 1.0%, 90년대는 연평균 2.6%로서 근년에 올수록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쌀 소비량의 감소추세는 음식문화의 다양화와 식생활 패턴의 변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둘째, 정부수매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확기에 집중적으로 출하되는 물량을 흡수해줄 민간유통주체(미국 종합처리장, 임도정공장, 산지수집상 등)가 계절가격진폭이 없음으로 인해서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확기에 농민들이 집중적으로 출하하지 않고 단경기까지 보관하거나 유통업체에 수탁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농민들은 수확기에 집중되는 자금수요 때문에 출하량의 약 70~80%를 수확기에 집중적으로 판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셋째, 이렇게 되면 수확기 쌀 집중출하로 가격이 폭락

할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이는 곧바로 농가소득 감소로 직결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아직까지도 쌀 소득이 농업소득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전남, 전북, 충남 등 논농업위주인 지역의 농가는 쌀 소득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한국농업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는 폭발성을 내포하고 있다. 금년 수확기에 쌀 가격이 지난해 수확기 가격보다 80Kg 가마당 10%정도(약 15,000원)만 하락한다 하더라도 쌀 소득감소액은 약 7,000억원에 달하게 되고 15%정도(약 20,000원) 하락한다면 쌀 소득감소액은 1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

넷째, 2004년 이후가 되면 관세화에 의한 개방이든, 의무수입물량(MMA)의 확대에 의한 개방이든, 외국산 쌀의 시중 유통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값싼 수입쌀이 들어오게 되면 가격하락은 피할 수 없으며, 이렇게 되면 생산기반이 급속히 위축될 우려가 있고, 국내 쌀의 자급률은 급격히 하락하게 된다. 고려대학교 자원연구소의 전망에 의하면 2010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년의 쌀 자급률은 76~90.4%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도 2011년이면 쌀 자급률은 81~91%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제 쌀 가격, 특히 자포니카쌀 가격은 급등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곧 우리의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국면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다섯째,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쌀 산업을 WTO체제에 맞게 시장기능에 맡기자는 의견도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쌀 문제를 말 그대로 시장경제원리에 맡기겠다고 생산요소인 농지에 대한 각종 규제도 풀어야 이치에 맞는데, 시장론자들은 대부분 이 부문에 대한



위기의 쌀 산업, 대책은 없는가?

이 해가 부족하거나 없는 것 같다. 농지 규제를 풀다면 농지를 당장 다른 용도로 전환해 쌀 공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쌀값 폭락에 대한 걱정도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이는 난 개발과 투자를 조장해 최악의 경우 농토가 거의 사라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간과하는 의견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대책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쌀 산업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쌀 농사를 살리겠다는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의 형성이다. 그리고 어쨌든 금년 수확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농민들의 인내와 유통주체들의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쌀 소비확대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가정에서 쌀 한 가마씩만 수확기에 더 매입해 준다면

최소한 약 500만석 정도는 흡수할 수 있어 쌀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해 본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첫째, 품질이 우수하고 환경친화적인 안전한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양질미 정책으로 양정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매등급기준의 상향조정, 종자공급체계의 전환, 양질미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설정 등의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고품질미 생산을 위한 브랜드 쌀 개발을 위해 계약재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여건에 적합하고 재배기술이 정립된 계약재배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소량이더라도 미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마케팅전략도 치밀하게 세워 명성을 얻도록 해야 한다. 고품질의 브랜드쌀 개발 없이는 앞으로 시장에서 존립하기가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WTO체제에서도 가능한 직접지불제도의 확대를 통한 소득보전정책을 강

화해야 한다. 우리실정에 맞는 다양한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경영체별 소득안정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산지 쌀 유통 인프라를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한다. 물벼상태로 산물 수집할 수 있는 수송수단이나 건조, 저장시설의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휴경이나 윤작에 의한 생산제한정책도 조심스럽게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의 식량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대승적 식량정책이 필요하다. 사실 쌀이 현재 조금 많이 생산된다고는 하지만 통일에 대비하고, 북한의 식량문제까지 고려한다면 결코 과잉이라고 볼 수는 없다. 순수하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하여 제도적으로 매년 일정량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협 및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해줄 필

요가 있다. 정부의 수매량이 생산량의 15%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민간유통기구, 특히 RPC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취급하는 물량이 유통량의 60~70%에 달하기 때문이다. 최근 농협 RPC와 민간 RPC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요인은 경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할 수도 있지만 그 보다는 쌀 수급 및 시장의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 즉, 기본적으로 쌀 과잉과 수요감소에 따른 시장유통물량의 증가와 재고누증에 의한 가격하락과 계절가격 진폭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농협 RPC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RPC 당 수확기 자체 매입량은 약 4,000톤이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60억원 정도인데 금년에 정부는 1개소당 약 28억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금리도 현행 5%에서 3%로 낮추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자금을 늘려주고 이자율을 감면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RPC 경영애로



농가의 대표적 소득원인 쌀 산업의 위기는 자칫 한국농업의 위기로 비화될 지도 모른다.

요인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지 근본적으로 수확기 쌀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다섯째, 쌀 소비촉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이다. 쌀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쌀 음식을 개발하고 홍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쌀 농가와 유통주체는 자체적으로 '1%기금화 운동' 등을 통하여 홍보비로 충당하는 술선 수범도 필요하리라 본다.

여섯째, 고품질 브랜드 쌀의 수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쌀 맛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본에서는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단백질 함

유량이 6% 미만이고, 정립율이 90%이상인 쌀을 계약재배에 의하여 생산하여 일본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만하다. 단백질 6% 미만 쌀의 재배를 위해서는 질소질 비료 시비량이 적어야 하므로 농가와 계약 재배하여 상징적으로 일본에 수출 하므로서, 우리 쌀의 안전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볼만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일이 있다하더라도 쌀 산업은 우리 민족과 함께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깊이 인식해야 한다. 모든 대책은 이러한 철학을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농약정보**